

“초역세권도 프랜차이즈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흔들리는 자영업 서울 주요 상권 가보니

④ 건대역

대학교·역세권 바탕 로드상권
평일·주말 유동인구 많지만
百·프랜차이즈 중심으로 붐벼
광진구 상권 3년 이상 생존율 37%



대학상권이 형성된 '건대 맞의 거리'(왼쪽사진)와 문을 닫은 지 1년이 넘는 호프집과 피부관리샵.

/정연우 기자

“개점 첫 달 매출액이 1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0만~40만원으로 말도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가게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인데 최저임금까지 오르고 있어 아르바이트생 월급조차 주기 힘들어요.”

8일 건대입구 역 인근 '로데오거리'에서 만난 자영업자 A(49)씨의 하소연이다. 지난 6월 도너 가게를 개업한 뒤 두 달이 지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건대입구 역 인근 상점가의 월 평균 임대료가 200만~50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A씨의 경우 임대료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매출에 영향, 프랜차이즈 아니면 자영업 힘들어

직장인들의 근무체계가 주 52시간으로 변경된 것도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어

든 이유 중 하나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로데오거리에서 12년째 토스트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 B씨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가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2시간 근무체제가 시행되다 보니 퇴근하면서 찾아오는 직장인 손님들이 많이 줄었다”며 “대학생 손님도 별로 없다”고 전했다.

B씨는 본래 아르바이트로 직원을 고용했지만 매출이 급감하면서 현재는 직원을 두지 않고 부인과 단 둘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 역 6번 출구 인근 '로데오거리'는 CGV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었지만 '로데오거리'라는 이름과 달리 의류 매장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C씨는 “근처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대부분의 고급 패션 브랜드들이 들어가 있어 최근에는 음식점이나 주점이 거리를 장악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매장이 아니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살아남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조양시장 방향으로 들어서자 중국어로 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다. 건대입구의 숨은 명소라 불리는 '양꼬치 거리'다. 음식점 외에도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은행과 환전소들이 많았다. 본래 이곳은 다세대 주택이었지만 성수동 일대 공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들이 값이 저렴한 월세방을 찾기 시작하면서 지난 2007년 중국인들이 터를 잡기 시작했다.

◆역세권에서 멀어질 수록 나타나는 폐업 상점들

건대입구 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먹자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겨 보았다. 일명 '건대 맞의 거리'로도 불리는 이 곳은 상

권이 잘 형성돼 있는 편이었다. 치킨호프, 퓨전 주점, 노래방, 맥주 전문점, 고깃집 등 대학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 비어있는 의류매장 한 곳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리 한 복판에서 쓸쓸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주인이 가게를 내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깨끗한 간판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화양시장을 지나서 구석진 골목으로 들어서자 상가 1층에 비어있는 가게 두 곳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잠겨있는 유리문 너머로 가게 안을 살펴보니 문을 닫은 지 오래된 듯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주변 상인에 따르면 맥주집의 경우 폐업한 지 한 달이 지났으며 피부 관리샵은 1년이 되었다고 전했다. 역세권에서 멀어질 수록 가게 유지가 힘들어 점주들이 폐업을 결정하는 분위기다. 먹자골목 상점가

의 경우 10평 기준으로 보증금은 2000만~5000만원, 권리금 1억~1억5000만원, 월 임대료 200만원이다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건대입구 상권이 속한 광진구의 경우 폐업률이 1.952%였으며 3년 이상 생존율은 37%였다.

건대입구 일대는 서울 10대 상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지하철 환승 역세권을 바탕으로 전형적인 로드 상권이 펼쳐져 있다. 백화점, 대형 마트, 대형 상업 시설이 초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기만 하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건대입구는 대학상권이라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유동인구는 많은 편이지만 장사가 안 되는 곳은 일찌감치 문을 닫고 가게를 내놓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 1면 '5인 미만 사업장...'서 계속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등 감당못해 '범법자로 전락' 우려

5인 미만은 유급휴가 41.8%(평균 69.9%), 퇴직금 15%(“ 47.3%), 근로계약서 33.8%(“ 61.4%), 노조가입률 0.9%(“ 11.9%) 등에서 모두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규모가 작을수록 전반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모습이다.

하지만 주로 5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설상가상' 격으로 최저임금도 급격하게 오르는데, 법대로 임금을 더 주려면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이 50%를 수당의 시간으로 지급 ▲토·일 근무시 통상임금의 50%를 휴일수당으로 지급 ▲22~06시 근무시 통상임금의 50%를 야간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경우 월급이 246만 정도인 노동자에게는 시간의 수당(1일 2시간, 월 65시간 근무 가정), 휴일 수당(월 65시간 근무 가정)을 더해 총 283만원을 줘야 한다”면서 “여기에 하루 8시간씩 야근을 한다고 가정하면 월급 283만원 외에 87만원의 야간수당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해 감당할 수 없고, 결국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한 관계자는 “여당과 일부 노동계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동의하고 나섰지만 최저임금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체까지 법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마포에 '청년창업타운' 조성... 300개 기업에 원스톱 지원

금융위

20층·1만여평... 국내 최대 규모
최장 3년간 금융·컨설팅 등 도와

국내 최대 규모의 청년 창업기업 지원 공간이 서울시 마포구에 조성된다. 이에 따라 창업 7년 이내의 300개 기업이 금융과 컨설팅, 해외진출 등 분야에 대해 정부의 원스톱 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포 청년혁신타운의 세부조성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

표된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위는 300개 청년 기업에 최장 3년간 창업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금융, 네트워크, 교육, 컨설팅, 해외 진출 등 전 분야를 패키지 지원한다.

이 시설은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을 청년혁신타운에 조성된다. 20층 건물의 연면적은 1만980평으로 유럽 최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스테이션F(프랑스)'와 동일한 수준이자 국내 최대 규모다.

정부는 혁신 아이디어와 창업 의지가 있으나 자금조달 노하우 등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 보육공

간 마련한다.

또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하고자 신촌(대학)-마포(창업공간)-여의도(금융사)간 혁신창업 삼각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아울러 강남 테헤란밸리, 판교 테크노밸리와 창업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도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공간에서 300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최장 3년 동안 금융, 네트워크, 교육, 컨설팅, 해외진출 등 전 분야를 패키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자인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다. 민간운영사 자체

선발, 데모데이를 통한 개방형·경쟁 선발 등 입주기업 선정 경로는 다양하다.

금융위가 주도하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의 창업기업 우대상품 지원에 강점이 있다.

또 예비창업과 초기창업, 성장(Scale-up) 단계별로 투자와 대출,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10조원 상당의 혁신모험펀드도 입주기업에 우선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혁신타운 공간 구성을 확정하고 내년 4분기 중에 건물을 개방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전체 개방 시점은 2020년 5월이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또 불발... 차기 회의서 논의

6차 지정심의위, 결론 못 내리 안정성 기준 적합여부 재검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약품'(이하 상비약) 품목 조정이 6차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유보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6차 안전상비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산제, 지사제 신규 지정 및 기존 소화제 2개 품목 해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산제와 지사제 판매 필요에 대한 공감대는 이뤘으나, 개별 품목 선정은 의약품 안정성 기준의 적합 여부를 따져 향후 다시 검토기로 했다.



강윤구 위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웨라튼서울플라스크호텔에서 열린 편의점 상비약 관련 복지부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가운데 타이레놀과 판콜에이, 판피린, 베아제, 휘

스탈 등 13개 품목을 상비약품으로 지정해 판매하고 있다.

당초 제산제로는 겔포스, 지사제로는

스펙타가 상비약 확대 품목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약사회는 겔포스가 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산제, 지사제 품목 지정 외에, 약사회가 요구하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500mg' 상비약 품목 제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약사회는 해당 의약품이 간 독성 등 부작용 위험이 높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편의점 상비약 품목에서 빼야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측은 빠른 시일 내로 7차 회의를 열고 제산제와 지사제의 안전상비약 지정 방안과 약사회가 제출한 타이레놀 500mg 제외, 편의점 판매 시간 조정 대안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서기자 min0812@